주간통일정세 2009-39(2009.09.21~09.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9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후계구도 시사하는 선전벽보 확인(9/24, MBC)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이름이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이며, 후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북한 내 선전벽보가 확인됨.
- 24일 MBC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대만의 한 사진작가가 원산 인근에서 촬영한 선전벽보 화면을 보도했다. 벽보에는 '만경대 혈통, 백두의 혈통을 이은 청년대장 김정은'이란 문구가 쓰여 있음. 또 후계구도와 관련된 노래로 알려진 '발걸음'이라는 곡의 가사 전문도 실려 있음.
-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이와 관련, "(김 위원장 3남 이름이) '김정은'이라는 첩보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다만 북한이 확인해주는 사항도 아니고 '김정운'인지 '김정은'인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발표하지 않았다"고 한나라당 정보위원인 정진섭 의원이 전언

○ 김정숙 최대업적은 김정일 출산(9/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의 60주기(9.22)를 맞아 북한 매체들은 22일 그가 김 위원장을 출산한 게 "대경사"이자 "최대의 업적"이라고 선전하는 등 김정숙 찬양 글들을 잇달아 게재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빛나는 생애'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 출산을 우회적으로 언급, "백두광명성을 높이 받들어 올리신 것은 우리 겨레의 휘황한 앞날이 기약된 대경사"이자 "위대한 계승의 새 시대가 뿌리내린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 이어 김정숙이 "조국과 혁명의 미래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시고 조선혁명의 걸출한 영도자를 받들어 올리시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민족의 대행운을 마련"해 줬다고 선전
- 노동신문도 '삼일포에 단풍이 불탄다'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이 땅에는 어머님을 한 번도 뵌 적 없는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자라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강성대국 건설의 주인공들로 성장하고 있다"며 '혁명 전통의 계승'을 부각시킴.
- 신문은 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혁명업적은 선군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

- 이어 김정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것은 "조국과 혁명,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이라고 신문은 선전

나. 정치 관련

○ 민주조선, 사회주의 붕괴되면 간부는 실업자(9/2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7일 '새 사회 건설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과거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간부들이 실업자로 전락했다면서 체제 전환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기득권 세력인 간부와 핵심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켰음.
- 신문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하여 환상을 품고 반제계급투쟁을 약화시키거나 포기하게 되면 어떤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는가 하는 것은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의 비극적 운명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주의가 붕괴되면 기득권 세력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는 점을 강조

○ 北, 국가과학원장에 장철 임명(9/26, 노동신문)

- 북한은 최근 변영립 국가과학원 원장을 해임하고 후임에 장철을 임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됨.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26일 "15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데 대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최근 보도문에 대한 각계의 반향을 소개하면서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이 쓴 글을 게재, 북한은 지난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당시 변 원장을 유임시켰었음.

○ 金국방 北核 선제타격 가능 발언 비난(9/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용납될 수 없는 도발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최근 취임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극히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어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민족적 중대사로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한 후 김 장관의 발언은 "남조선 집권층 내부에 아직도 북남대결 관념이 뿌리깊게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를 "대결론자"라고 비난

북한, 올 4월, 11년만에 헌법 개정(9/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11년 만에 개정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 대신 '선군(先軍)사상'을 명기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가 한국이나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하면서도 더 강력한 기능을 갖도록 한 것으로 드러남.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일본에 있는 대북 소식통을 통해 최근 개정된 북한 헌법을 소개, 개정된 북한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 강화', 이 소식통은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주체(主體)사상'과 '선군사상'을 짝을 이뤄 사용한 문구가 들어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동일시한 것"이라고 주장
- 1998년 9월에 개정한 북한 헌법에는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함께 '공산주의'가 세 번 가량 언급됐었음. 하지만 4월의 헌법 개정에선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
- 또한 이번 헌법 개정에선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한 6개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규정해 '영구 주석'으로 남아 있는 김일성의 위상과 격을 맞췄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이는 "국방위원장이 중요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사면권을 행사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고 소식통은 소개
- 이 소식통은 또 "개정 헌법에서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사업 전반을 지도하고, 국방위원회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입안하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 기존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방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도 사실상 국방위원회가 국가사업을 모두 관장했기 때문에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있었음.

北, 식료일용공업상에 정연과 임명(9/2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지난 7월 장관급 내각 기관으로 신설한 식료일용공업성의 상(장관)에 정연과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23일 평안북도 신의주화장품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에 김평해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정연과 식료일용공업상이 참석했다고 24일 보도
- 정 식료일용공업상은 2004년 6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인솔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그밖의 이력은 알려지지 않음.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월 22일 '정령'을 통해 식료일용공업성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음.

노동신문, '100일 전투' 독려(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승리의 북소리 높이 총공격전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 대고조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100일 전투

가 “올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전변의 해로 빛 내이기 위한 최후 돌격전이며 당 창건 65돌이 되는 다음 해에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격전”이라고 강조

- 신문은 이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150일 전투에서 거둔 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새로운 100일 전투 기록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며 2012년까지 “점령해야 할 목표는 비상히 높고 주어진 기간은 짧지만 우리는 이 기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껴야 하며 그러자면 혁명적 대고조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고 독려

○ 北노동당 ‘연말까지 100일 전투’ 공식 발표(9/2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21일 대중동원형 경제증산 운동인 ‘150일 전투’의 마감과 연말까지 새로운 ‘100일 전투’의 진행을 공식 발표
- 노동당 중앙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매체를 통해 발표한 ‘ 보도문’에서 “지난 4월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150일 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됐다”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방식이며 투쟁기풍”인 만큼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100일 전투에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 노동당은 ‘150일 전투’ 시작 때는 이러한 보도문을 내지 않았음.
- 이날 노동당은 ‘100일 전투’의 시작과 종료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150일 전투’에 이어 곧바로 시작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군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인 12월 24일이 99일째가 되며, 그가 지난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창했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한 12월 25일이 100일째가 된다고 설명

다. 경제 관련

○ 김정일, 자립적 경제부흥 강조(9/26,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래 “현지지도 강행군”을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기초한 부흥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생활수준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주장
- 신문은 <현지지도 강행군의 진실> 중편 ‘경제부흥의 지름길 제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북한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의 경제난 시기에 추진했던 “경제의 주체화”의 “결실을 가꾸는 노정”이라며 이같이 언급
- 신문은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렸다는 판단의 1차적인 기준은 인민들의 생활 실감”이라며 “그 무슨 경제지표를 자랑하고 정치 술어를 나열하여도 인민들이 잘살게 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

다"면서 "현지지도 강행군의 현장에서 거듭 강조되는 대목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

北, 스위스회사 통해 마그네샤 유럽 수출(9/25,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의 대표적 광물인 마그네사이트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광산개발 회사인 '퀸테르미나'를 통해 야금공업에 필요한 내화물(耐火物)의 재료인 마그네샤 형태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퀸테르미나'는 현재 북한에서 '조선마그네샤크링카산업그룹' 및 '승리경소마그네샤공장'과 사업계약을 맺어 다양한 형태의 마그네샤를 생산하고 있다고 VOA에 밝힘.
- 이 회사의 아벨 코플레 이사는 "주로 영국과 독일, 동유럽 국가의 내화물 제조업체들이 고객"이라며 "최근에는 독일이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에서 마그네샤 생산량을 늘려 경소(輕燒) 마그네샤(마그네사이트를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구워 만든 가루 모양의 산화마그네슘)는 연간 10만t, 중소 마그네샤는 4만~5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

조선신보, 北, 2012년까지 경제 집중전 상정(9/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북한이 '150일 전투'에 이어 바로 '100일 전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외국의 일부 언론들은 조선(북)의 전략노선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선행한 전투가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150일 전투'의 성과를 나열
- 신문은 '충천한 기세로 100일 전투 전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150일 전투'와 같은 총동원전, 총집중전이 경제적인 비약의 계기점으로 될 수 있다"면서 애당초 북한은 "2012년까지의 집중전을 상정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150일 전투 기간에 "천리마제강을 비롯한 금속공업 부문에서 생산이 크게 장성한 것이 경제활성화의 큰 요인"이라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150일 전투가 끝난 9월 중순에 이미 "지난해에 비해 강철은 5.7배, 압연강재는 4.4배, 주체철은 3.8배로 생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수치를 밝히지 않음. 천리마제강은 또 2012년까지의 주체철의 생산능력은 올해의 3배, 생산량은 올해의 3.5배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고 신문은 주장

北무역은행, 각국 은행과 거래 확대(9/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무역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은행과 거래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전언
- 통신은 "무역은행은 나라의 국제적 권위와 경제적 위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은행의 업무능력과 대외적 신용을

더욱 높이고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과의 거래관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주장, 또 "무역은행이 지난기간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과 거래관계를 확대하고 대외결제를 원만히 보장해 무역을 비롯한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

- 무역은행은 이날 평양에서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를 가졌으며 행사에는 방북한 러시아, 모잠비크, 몽골, 인도, 태국, 프랑스, 말레이시아의 은행 및 회사대표단이 참석

FAO, 北, 식량 180만t 부족(9/24, 자유아시아방송)

- 올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예년보다 감소해 북한이 앞으로 170만~180만t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북한의 올해 예상 쌀 수확량은 240만~260만t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옥수수 수확량도 130만-200만t 사이로 예년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FAO는 분석
- 최근 방북했던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평년의 250만t에 비해 무려 100만t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
- FAO의 키산 군잘 식량안보 분석관은 "올해 북한에 비도 적당히 오고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는 등 농사짓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지만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고 농기계가 낙후해 생산량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

北채권가 두달 새 약 30% 상승(9/23,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의 가격이 최근 두달 사이에 약 30%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사의 스튜어트 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현재 북한 채권의 가격이 달러당 9센트로 7월보다 2센트(28.6%) 올랐다"며 "지난 4월 6센트의 최저가로 바닥을 친 이후 계속되는 상승세"라고 설명, 그는 북한 채권가 상승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에 가해진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사라진 점이 이유인 것 같다"고 분석
- 서방 은행들은 북한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1994년부터 채권을 발행해 왔으며 북한이 이들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약 16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RFA는 소개

○ 유럽기업방북단, 투자 모색 방북(9/22, 미국의소리방송)

- 네덜란드 현지 정보기술(IT)과 섬유관련 기업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유럽기업단이 대북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2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
- 이번 방북은 네덜란드의 정보기술(IT) 컨설팅회사인 GPI컨설턴시와 북한 상업회의소가 주관하며, 기업방북단은 26일까지 5일간 머물면서 IT와 섬유 등의 분야에서 사업협력 정보를 얻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단장인 폴 치아 GPI컨설턴시 대표가 설명
- 방북단은 IT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만화,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관련 분야에서 북한 업체들과 개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양과 근교에 있는 농업, 섬유, 의류 업체의 본사와 공장도 둘러보면서 협력 및 무역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
- 이들은 23일엔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참관한 뒤 북한 최대의 IT 연구개발기관인 조선컴퓨터센터를 방문하는 데 이어 24일 김책공대와 정보처리업체 '다코르'를, 25일엔 IT 합영회사 '노소텍'과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를 각각 방문할 예정
- GPI컨설턴시 주도로 네덜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의 기업이 포함된 유럽기업방북단은 지난해 9월 처음 방북했었음. 폴 치아 대표는 "이전에 방북했던 유럽 기업가운데 일부는 북한에서 IT와 BPO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북한과 IT관련 개발용역 사업에 착수했다"며 "네덜란드의 일부 컴퓨터 게임업체들은 IT개발의 일부분을 북한의 소프트웨어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설명

○ 北, 2012년까지 전역에 대형정수설비 도입(9/17, 노동신문)

- 북한의 국가과학원은 북한 전역의 도, 시, 군들에 '대형 물소독수 제조설비'들을 오는 2012년까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국가과학원은 평양시에 대형 물소독수 제조설비들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목표를 세웠음.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김책공대에 '컴망' 이용 원격대학 설립(9/25,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중 컴퓨터망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원격대학을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창설, 본격 운영한다고 조선신보가 25일 보도, 원격대학은 기존의 통신대학, 공장대학, 텔레비전방송대학, 야간대학, 재교육학교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한 형태로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신문은 설명

- 신문에 따르면 이 원격대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 1월 김책공대에 새로 설립된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도서관이 진행하는 원격교육을 보고 "이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교육"이라며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김책공대에는 원격교육센터가 만들어져 이미 이 대학의 통신생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원격통신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원격대학 강의는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에 있는 원격강의실과 원격교육센터에 있는 3개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실시간망, 비실시간망으로 지방의 학생들에게 제공"된다고 신문은 설명

北사회에도 노래방 문화 넘실(9/25, 조선신보)

- 북한의 음향기기 전문회사인 '메아리음향사'가 2008년 마이크식 화면반주기를 생산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의 오락회 양상이 "기타나 손품금의 반주에 맞춰" 노래하던 것에서 '가라오케(노래방)'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선신보는 25일 '언제 어디서나 노래자랑, 마이크식 화면반주기 대중적 보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회사가 '수많은 인민군 부대들'에 이 반주기를 보내줬고, 기관, 기업소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개별적으로 구입에 나서는 바람에 "주문량에 생산이 못따라 갈 정도"라고 소개, 이 회사는 올해 2천대를 팔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이 곧 연간 생산능력이어서 시설을 증설, 내년엔 3천대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

北클래식 대중화 선봉 삼지연악단(9/25, 조선신보)

- 북한 만수대예술단 소속 삼지연악단이 클래식 음악 대중화의 선봉에 나섰음. 이 악단의 연주가와 독창가 50여명은 평균 나이 20대 초반에 "모두가 멋쟁이, 쌩쌩한 젊은이들"로 구성됐으며, "어제날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창조된 음악"으로 1990년대 북한 주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보천보전자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 인기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5일 소개
-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이 악단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성 악장이 지휘도 하고, 연주 도중에 단원들이 악기를 놓고 손뼉을 치며 청중의 박수를 유도하는 등 파격적인 연주형식으로 대중과 호흡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둠.
- 조선신보는 북한의 음악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삼지연 악단의 특징은 "음악의 고상한 것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관중이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통속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데 있다"고 설명

○ **평양서 고조선시대 석기 제작터 발굴(9/24, 조선신보)**

-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최근 평양시 삼석구역 표대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구덩이 2개와 승호구역 리천리 유적에서 고조선 시대 석기도구 제작장으로 추정되는 집터를 각각 발굴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北주민들에게 인민군은 '공포의 공산군'(9월호, 임진강)**

- 북한에서 '공산군'이라는 표현은 원래 "미국이나 남조선과 같은 적국의 군인들이 조선인민군을 가리킬 때 쓴 공포의 호칭"이라고 설명됐었음. 그러나 '인민의 군대'였던 북한 군인들이 "심각한 물자와 식량 공급 부족에 몰리던 끝에 무서운 강도로 변신"하는 등으로 인해 인민군이 '적들의 적'에서 '인민의 적'으로 변하고 말아 언제부터인가 주민들이 북한군을 '인민군' 대신 '공산군'으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자타가 부르는 인민군의 이름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임진강 소식지가 주장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 **안보리, 北·이란 겨냥 '核물질 회수 결의문' 채택(9/25,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정상들은 24일 민간 핵기술을 제공받은 뒤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한 국가에 대해 핵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결의문 1887'을 만장일치로 채택
-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유엔 안보리 핵 정상회의는 결의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물질과 장비를 제공한 국가가 만약 수혜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NPT를 탈퇴하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 이 같은 회수 권한은 수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발동됨. 이는 제공받은 민간 핵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한 국가에 대해 군사·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한 것으로 북한과 이란에 적용될 것으로 보임. 결의문은 두 국가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NPT가 추구하는 핵확산금지정책에 '주요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

나. 북·미 관계

○ **오바마, 北 새방향 가도록 압박 계속(9/27,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올해 초 우리는 북한

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중단하도록 새롭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면서 이같이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연설에서 이번 주 열린 유엔총회 결과 및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비확산 책임 준수를 거듭 촉구,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전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우리들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美, 대북 식량지원 실무대책반 가동(9/25, 자유아시아방송)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재개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박사가 주장, 매닌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암시해오거나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오바마 정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실무대책반의 활동이 꽤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시사

美스타인버그, 곧 비핵화재제 돌입 방안 공개 희망(9/25, 미국의소리방송)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목표에 강력한 합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들 나라는 이런 과정에 어떻게 돌입할 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4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정책설명회에서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며칠 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내주 동북아 순방 때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부분적인 조치가 취해졌다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최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는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美대북인권특사에 로버트 킹(9/25,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킹 전 미 하원 외교위 국장을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24일 밝힘. 킹 특사는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2004년 입안된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여하기도 했음. 북한 인권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그동안 공석이었음.

○ 김정일, 北·美 양자대화 우선시 의도 밝혀(9/22, 교도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22일 보도
- 소식통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언, 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
- 이어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다자 대화'가 6자회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다자 대화와 북·미 양자대화를 병행하고 싶어 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설명,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북한과 미국이 수차례 회동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 교도통신은 다이빙궈 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이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소개

○ 美, 김정일 발언 6자회담 연결돼야(9/20, 연합)

- 버락 오바마(Obama) 미 행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밝힌 "양자·다자 협상" 발언이 6자회담 재가동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Campbell) 동아태 차관보는 19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
-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캠벨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복귀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행해 다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지켜볼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6자회담 복귀를 촉구

다. 북·중 관계

○ 北-中, 군대교류 확대·심화(9/2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23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중국의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면담하고 양국 군대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쉬 부주석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중국 당과 정부, 군대는 일관하게 전략적 높이에서 중·조(북) 친선을 대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이어 그는 "두 나라 군대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며 "현 시기 중·조 두 나라 군대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시켜 나갈 데 대하여"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면담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과 마샤오톈(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부주임이 배석했다고 보도

中 원자바오 총리 내달 4일 방북(9/26, 연합)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월 4일 북한을 방문해 이틀 뒤인 10월 6일 평양에서 열리는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양국 소식통이 밝힘.

김영남, 中인민일보 사장 면담(9/23,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중인 장옌눙(張硏農)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일보 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장 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을 전달

라. 북·러 관계

러시아, 北에 식량지원(9/25, 조선중앙통신)

-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25일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조선에 기증하는 식량이 함경북도 라진항에 도착했다"며 "기증식이 25일 현지에서 있었다"고 소개, 그러나 통신은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기증식에는 김지석 수매양정성 부상, 채송학 라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

마. 북·일 관계

北, 日과 외교문제 대담한 결심 가능(9/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북일간 대화 재개문제에 대해 "조선(북)은 근시안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견지에서 외교문제를 다루고 대담하게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신문은 '국제정세의 격변과 조일관계 개선의 기회'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중단된 대화의 재개는 그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내려 풀어야 할 문제"이고 "조선

은 오늘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신문은 "(일본의) 새 정권이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한다면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총리가 밝힌 지향이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정책노선으로 확인된다면 조선측도 호응해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

민주조선, 美-日관계, 마찰 피할 수 없을 것(9/2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4일 '급격한 변화 속에 낯설어지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에서 새로 집권한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과 미국 행정부간 관계가 "시작부터 삐걱"대면서 "점차 멀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일간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과거 "자민당 정권과 뿌리가 다른 새 정권"이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이전을 재검토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의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활동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민주당 정권의 정책들을 부각시켜 다룸.

바. 기타외교 관계

보안성대표단 시리아 방문(9/26, 조선중앙방송)
- 시리아를 방문하는 리병삼 정치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2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쿠바대사 연회 개최(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권수립 61주년(9.9)에 즈음해 호세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가 2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이날 연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용진 교육상, 로성실 여맹 위원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납북 동진호선원 2명 20년만 가족 상봉(9/26, 연합)
- 남북 이산가족 추석 상봉 행사가 26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시작돼 남측 이산가족 97명이 북한에 사는 가족 228명과 60여년 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눴음. 이번 상봉행사에선 특히 국군포로 한 가족과 납북 어선 동진 27호 선원 두 가족이 '특수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회

개성 北근로자가 고품질 인증 첫 획득(9/25, 연합)
-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들도 따내기 어려운 정부의 고품질 인증서를 획득,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북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식품용기 제조업체 '㈜성림정공'이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청이 수여하는 '싱글 PPM 품질인증'을 획득, 이날 공단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힘. 이 인증은 최근 6개월 동안 생산한 제품에서 불량품 비율이 100만개 중 10개(0.001%, 10PPM) 미만일 때 주어짐. 현재까지 품질 인증을 받은 공장은 전국에 1천664개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성림정공은 지난해 7월부터 싱글PPM 품질혁신활동을 시작해 1년 2개월 만에 인증을 받게 됐음. 인증을 심사한 대한상의 측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2~3년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인증서를 불과 1년여 만에 달성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 ㈜성림정공은 플라스틱 용기인 식용유 뚜껑을 생산해 CJ제일제당에 납품하는 회사로, 2008년 4월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했다. 현재 88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3명의 한국 측 주재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음.

남북, 개성공단탁아소 건립 합의서 체결(9/23, 연합)

- 남북이 23일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탁아소 건립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탁아소 수용 인원은 약 200여명이며, 연면적은 858㎡(약 260평)"라고 소개
-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립비용 약 9억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 건립 이후 탁아소 운영은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맡게 되며 입주기업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기·가스비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부는 소개
-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 사업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007년 합의한 것으로, 정부는 작년 11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탁아소 건설비용 9억원을 의결한 이후 설계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음.

北화물선, '북한산 제수용품' 가득 싣고 부산항에(9/23, 연합)

-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북한산 제수용품을 가득 실은 북한 국적 화물선이 부산에 도착, 23일 부산항만공사와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부산항과 나진항을 오가는 북한국적 정기 화물선 '단결봉호'(1천592t)가 22일 오후 10시께 나진항을 출발, 25일 오전 8시께 부산 감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소개
- 열흘에 한번 꼴로 부산과 나진항을 오가는 단결봉호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는 것은 이젠 낯설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에는 단결봉호의 화물량이 보통 때보다 크게 늘었음. 이유는 추석을 맞아 마른 고사리와 버섯, 새우, 명태살, 대구, 냉동 문어 등 제수용품을 많이 실었

기 때문임.

- 단결봉호의 대리점인 국보해운은 “보통 때 단결봉호가 북에서 싣고 오는 화물은 약 6m 짜리 컨테이너로 80~90개였는데 이번엔 120~130여개로 늘었다”면서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나물류에다 해산물이 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 북한에서 수입된 농수산물들은 북한 물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재래시장의 도매상으로 유통됨. 북한 농수산물은 무관세여서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다 북한 물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나아져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음.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클링너 "美, 북·미대화서 협상 말아야"(9/25)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 "앞으로 있을 북·미 양자대화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함.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핵 협상은 다자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대화와 협상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미대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정부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며 10~11월 중에는 (북·미대화가)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 양국간 이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에서 모든 관련국의 동의하에 필요한 북한의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담은 그와 같은 전략적 청사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이행은 아마도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가능한 한 많은 아이템을 담은 포괄적 패키지를 통해 북한이 취하는 여러 조치에 대한 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아이템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련국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클링너 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 대해 '놀랐다'거나 '모르겠다' '그(이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일부 미국 정부 관료들의 언급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파트너로서 이는 미국의 외교적 실수"라며 "정부 관료들은 알지 못하거나 생각이 달랐다고 할지라도 이를 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함.
- 그는 "한국에 오기 직전 미국 정부 관료들을 만났을 때 아직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었다"며 "또한 미국이 한국, 일본 등 관련국들 모르게 북한과 거래를 하려는 징후도 전혀 없었다"고 소개함.
- 북한인권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차 지난 19일 방한한 클링너 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에서 20여년 근무하고 2003년 은퇴한 대북 정보통으로 2007년 6월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활동하고 있음.

<오바마, 북한 '核 책임론' 언급 의미는>(9/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직접적이고도 강도높게 경고하고 나선 것은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핵없는 세상' 비전에 이들 국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임.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행한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지금까지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볼 때 이들 정부는 우리(세계)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핵·미사일 커넥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북한과 이란에 한 묶음으로 경고를 보냄.
-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금까지 취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대이란 관련 제재결의안을 재확인(reaffirm)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보리 핵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임. 이는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글로벌 핵문제, 특히 핵확산 방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방증함.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4월초 유럽을 방문, '핵없는 세상'을 주창하면서 이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핵전력 감축을 제안했고 실제로 미.러 양국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상태임.
- 이 같은 '핵없는 세상' 구상은 내년 4월 미국에서 열릴 핵 정상회의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 강화 등의 형태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전망임. 이런 맥락에서 현재 동북아와 중동의 최대 골칫거리인 북한 및 이란 핵 문제에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놓는게 오바마 정부에 주어진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전 세계는 국제법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며, (핵관련) 조약들이 이행될 것임을 다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NPT체제 강화를 통해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나 마찬가지임.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택할 수 있는 두 갈래 길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섬.
-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북한과 이란)이 의무를 다한다면 양국의 번영 및 평화의 길을 열 외교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당근'을 내보였으나, "만일 그들이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을 고조시키는 행위의 위험을 망각한다면 그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채찍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이는 결국 핵비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나선다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반대의 길을 간다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 조만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북·미 양자대화 및 내달 1일 스위스 제

네바에서 개최되는 '서방 6개국+이란 대화'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경고가 어느 정도 먹혀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임.

美스타인버그 29일 방한..북·미대화 협의할듯(9/24)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 정부대표단이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미 국무부가 23일 밝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대표단은 국무부를 비롯해 백악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짐.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7~28일), 중국 베이징(28~29일)을 방문하며, 서울에 이어 일본 도쿄를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문함.
- 미국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총괄지휘하고 있는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여부 등 북·미대화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는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보여 주목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스타인버그 부장관 일행은 방문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다자, 글로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역내 동맹들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함.

하토야마 "북·미 양자대화 동의"(9/23)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3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북한과 미국 간 양자대화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북·미 간 양자대화의 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발간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특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에는 동의한다고 말함.
- 하토야마 총리는 "이 과정(미 특사의 방북)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6자회담 복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힘. 일본 신정부 출범 후 하토야마 총리가 북·미 간 양자대화에 명확한 동의의 뜻을 보냄에 따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등 미국과 북한 간의 조기 대화 가능성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됨.
- 워싱턴 포스트는 하토야마 총리가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두 차례나 미·일 간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다고 전함. 하토야마 총리는 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한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기도 함.
- 이 밖에 그는 일본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일 간 갈등 여부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변화의 메시지로 당선됐고 이는 양국 국민들의 활력을 이끌었다면서 미·일 양국관계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함.

○ **"6자회담, 북·미합의 추인 포럼될 수도"(9/23)**

-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화 성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그간 북핵문제의 협상장이었던 6자회담이 실제 회담의 기능을 상실한 채 북·미 회담을 추인하는 포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지난 9일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핵개발 및 외교' 보고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과 '양자든 다자든 6자회담 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 입장 사이에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의 성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점침.
-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회담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미국의 또 다른 선택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간 이뤄진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동의 또는 지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이행을 약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봄. 보고서는 "이 문제(북한에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것)는 만일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합의를 통해 재정적 약속을 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지적함.
- 이어 보고서는 "만일 이런 옵션이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명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반대를 철회시키기 위해 유엔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함. 북·미 양자 혹은 다자회담 재개시 북한이 제기할 의제와 관련, 보고서는 올해 초 셀리그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의 평양 방문 당시 북한이 제시한 내용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함.
- 당시 북한은 ▲비핵화 달성 이전 단계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비핵화 범위에 전체 한반도 포함 ▲남한내 미군기지 등 남한에 대한 검증.사찰 병행 등을 주장했고,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함. 특히 보고서는 "주한·미군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그간의 미국 입장이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남한과 한반도 주변의 미군 구성 및 운용과 관련한 중대한 군사적 양보문제를 놓고 협상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관측함.
- 보고서는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게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플루토늄 생산을 억지할 수 있도록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제한적인 목표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말함. 또 보고서는 북한이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우라늄 농축문제와 관련, "북한이 9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농축)실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아직까지는 원심분리기를 기반으로 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이 진전된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美 "北 6자복귀 위해 양자대화가 최선"(9/22)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미 양자대화가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나오게 할 최선책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미 관리들이 21일(현지시간) 전함. 이들은 또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북 직접대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 같은 전언은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호주, 일본 등 각국 대표를 만난 뒤 나온 것임.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회담과 관련, 기자들을 만나 "북한을 어떻게 6자회담 과정으로 돌아오게 하느냐가 (대화의) 초점이었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북한의 6자회담 과정 복귀를 위해 양자대화에 임하는 방안에 대체적인 합의와 지지가 있었다"고 밝힘.
- 또 아시아 각국 대표와 회담에서 클린턴 장관과 동석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 틀 안에서 대화를 재개하도록 중국이 이번 회담 기간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캠벨은 중국이 대체로 북한과 관계를 언급할 때 "매우 신중한" 표현을 쓴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책임 있는 외교 창구로 돌아오게 하도록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정말 감사한다"고 전함.
- 그는 이어 유명환 장관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클린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을 "준비되고 신속하게 재개"하는 데 목표를 집중한다면 북·미 양자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함. 그는 아울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병세와 북한의 후계문제에 대해 "지금은 불확실한 때"라며 "(북한의) 후계구도 및 김정일의 불확실한 건강과 관련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곳(북한)의 진척 상황에 대한 (관련국 간) 조용한 대화와 협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함.

美, 北 합의이행 '그랜드 바겐' 전제 시사(9/22)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결방식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과 관련, 북한의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2007년 2.13 합의 이행이 사실상 전제조건임을 시사함. 캠벨 차관보는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간의 한·미 외무회담 직후 뉴욕에서 가진 회담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 외무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함.
- 캠벨 차관보는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거듭 전제하면서도 "북한이 강조했던 2005년과 2007년의 모든 합의들에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헌신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

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패키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힘. 그는 "이는 진전을 위해 지금까지 수개월간 이어져 온 일반적 원칙"이라면서 "문제는 우리가 매우, 매우 이것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이어 "우리는 진전을 위한 최소한의 일부 조기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작지만 근본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함.

- 캠벨 차관보는 또 이번 한·미 외무장관 회담은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면서 "그들(한국)은 미국의 조심스러운 북한과의 양자접촉(careful bilateral interaction)에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함. 그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의 결과와 관련, "우선 양국은 유엔 결의 1874호의 공동 이행을 계속할 것을 강하게 약속했다"면서 "두 장관은 아시아국뿐만 아니라 중동 등 다른 곳에서도 효과적인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목격하기 시작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 이와 함께 그는 "모든 당사국들은 6자회담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6자회담 복귀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고 전함. 캠벨 차관보는 또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가장 명확하고 굳건하다"면서 "북한이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핵심 공약인 2005년, 2007년 서명한 근본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 모든 당사국들이 강하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그는 "북한 내부의 사태 전개에 매우 긴밀히 조율하고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의했다"면서 "(지금은) 불확실한 시기로 우리는 미래의 권력 승계와 관련된 일부 이슈들과 불확실한 김정일의 건강 문제 등을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그는 "이 때문에 그곳(북한)에서의 사태 전개에 대한 조용한 대화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함. 캠벨 차관보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만일 북한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면 우리는 경제적 지원 문제와 인도적 지원 문제를 분명히 분리할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그는 "인도적 지원은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면서 "전달을 검증하는 명백한 능력 및 식량, 의약품 및 지원물품의 배포와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나. 미·북 관계

○ 오바마 "北 새방향 가도록 압박 계속"(9/2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통해 "올해 초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중단하도록 새롭고 강력한 제재

를 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이런 언급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은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연설에서 이번 주 열린 유엔총회 결과 및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비확산 책임 준수를 거듭 촉구했음.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전하면서 "이란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우리들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는 이어 제2 우라늄농축 시설 논란이 불거진 이란 핵문제와 관련,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심각하고 긴급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지 고립에 직면할지를 이란 지도부가 선택하라고 요구했음. 그는 "이 문제를 진지하고 의미있는 대화를 통해 풀자는 내 제안은 열려 있지만,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완전히 협력해야 하며 평화적 의도를 증명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음.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인권특사 지지(9/27)

- 하워드 버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에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음. 버먼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 국장에 대한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말했음.
- 그는 "킹 지명자는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고, 의회 인권위의 설치와 감독에도 도움을 줬다"면서 "킹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이정표적인 법안 통과에도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음.
-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고(故)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내고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여하기도 한 킹 전 국장을 지난 24일 지명했음.

美국무부 "北인권 우려..인권특사 지명"(9/26)

- 미국 국무부는 백악관이 전날 로버트 킹 전 미 하원 외교위 국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한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25일 말했음.
- 국무부는 또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한 북한과의 양자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탈북 난민 등을 비롯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24일 킹 국장을 지명했음.
- 킹 국장은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무부의 대북정책 고위관계자들과 함께 대북정책 형성에 참여하게 됨. 이와 함께 켈리 대변인은 북한과의 양자대화와 관련, "어떤 결정도 이제까지 나온 게 없

다"면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양자회담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발표할 만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美, 대북 식량지원 실무대책반 가동"<美전문가>(9/25)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재개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박사가 말함. 매닌 박사는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암시해오거나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오바마 정부는 그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실무대책반의 활동이 꽤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방송은 전함.
- 그는 "북한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다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식량 지원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음. 그는 오바마 정부도 "북한이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경제 개혁, 식량 분배 감시 등의 문제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언제든지 식량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함.
-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원한다면 어떤 국가에건 5천만 달러를 용도에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의 폭이 북·미 대화의 진전에 따라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RFA는 전함.

美대북인권특사에 로버트 킹(9/2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킹 전 미 하원 외교위 국장을 북한인권특사에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24일 밝힘. 북한 인권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공석이었음.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 대화가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한 것은 북한 인권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임.
- 킹 특사는 의회 근무 기간 25년 중 24년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 등에 기여한 대표적인 지한파인 고(故)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에 관여하기도 함. 그는 '톰 랜토스 의회 인권위원회'의 전신인 의회인권 코커스의 설립 등을 포함한 랜토스 위원장이 벌인 인권 문제와 연관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음. 킹 특사는 플레처스쿨에서 국제 외교관계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 **"김정일, 北·美 양자대화 우선시 의도 밝혀"<교도>(9/22)**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22일 보도함. 소식통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8일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교도는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어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대표단에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다자 대화'가 6자회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다자 대화와 북·미 양자대화를 병행하고 싶어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북한과 미국이 수 차례 회동한 뒤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교도통신은 다이빙궈 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이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함.

○ **美 "뉴욕에서 북·미접촉 없을 것"(9/22)**

- 미국 국무부는 21일 유엔총회 기간에 뉴욕에서 북·미간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 기간 북·미간 접촉이 있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북한에서 온 어떤 당국자와도 뉴욕에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함. 켈리 대변인은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 초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힘.

다. 중·북 관계

○ **北-中 "군대 교류 확대.심화"(9/24)**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23일 베이징의 8.1청사에서 중국의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면담하고 양국 군대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쉬 부주석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중국 당과 정부, 군대는 일관하게 전략적 높이에서 중·조(북) 친선을 대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그는 "두 나라 군대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며 "현 시기 중·조 두 나라 군대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시켜 나갈 데 대하여"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면담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과 마샤오톈(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부주임이 배석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라. 일·북 관계

○ 日 납치피해자 가족편지 김현희씨에게 전달(9/25)

-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인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田中八重子)씨의 장남이 대한항공기 폭파범인 김현희씨와의 면회를 요구하면서 약 5년 전에 외무성에 맡겼던 편지가 지난달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NHK가 25일 전했음.
- 방송에 따르면 이 편지는 지난달 하순 서울 시내의 호텔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에 의해 김현희씨에게 직접 전달됐음. 편지는 북한에 납치된 뒤 김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야에코씨의 장남인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郎)씨가 약 5년전 김씨에게 보내 달라면서 외무성에 위탁한 것임.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가 이 편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외무성이 계속 보관하고 있었음.
- 이즈카씨는 지난 3월 부산에서 김현희씨와 만났지만, 당시 이 편지를 반환받지 않은 상태여서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이번에 외무성 관계자를 통해 전달하게 됐음.
- 김현희씨는 이즈카씨를 만난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와 몇 차례 면담을 했고, 이들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음.

○ "北, 日과 외교문제 대담한 결심 가능"<조선신보>(9/25)

- 북한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북일간 대화 재개문제에 대해 "조선(북)은 근시안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견지에서 외교문제를 다루고 대담하게 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이 신문은 '국제정세의 격변과 조일관계 개선의 기회'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중단된 대화의 재개는 그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내려 풀어야 할 문제"이고 "조선은 오늘의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조선신보의 이 같은 기사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새로 취임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의 대북 정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일간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조선신보는 "지금은 각국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면서 태세를 다시 갖추는 국면인 것 같다"며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대화의 구도에서 금후 일본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무슨 주제로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는가는 결국 일본 자신의 결단에 달렸다"고 주장함. 이 신문은 "(일본의) 새 정권이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직시한다면 조선과의 관계개선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총리가 밝힌 지향이 그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정책노선으로 확인된다면 조선측도 호응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함.
- 신문은 "하토야마 정권이 이웃나라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을 바란다면 우선 조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역대정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배반행위는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작년 후쿠다 정권에서 합의된 내용이 회담 직후 등장한 아소 정권에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함. 조선신보는 "조일관계 개선에 대한 조선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두 나라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되기 위한 방도는 평양선언에 있다"고 덧붙였음.

마. 기타

○ "탈북자들, 덴마크 대사관서 2주 머물 듯"(9/25)

-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며 베트남 하노이 주재 덴마크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모두 8명으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이곳에서 2주간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이 25일 밝혔음. 이 소식통은 전날 덴마크 대사관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여성 6명과 남성 2명이라며 덴마크 대사관 차고에서 밤을 보낸 후 임시거처로 텐트를 세웠다고 전했음.
- 그는 관계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탈북자들의 정치적 망명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데는 약 2주간 이곳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급적 빨리 그들이 떠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음. 또 대사관은 탈북자들에게 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대사관 경비원 화장실을 나눠쓰도록 했다고 덧붙였음.

○ 유럽기업방북단, 투자 모색 방북(9/23)

- 네덜란드 현지 정보기술(IT)과 섬유관련 기업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유럽기업단이 대북 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22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함. 이번 방북은 네덜란드의 정보기술(IT) 컨설팅회사인 GPI컨설턴시와 북한 상업회의소가 주관하며, 기업방북단은 26일까지 5일간 머물면서 IT와 섬유 등의 분야에서 사업협력 정보를 얻고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단장인 폴 치아 GPI컨설턴시 대표가 말함.
- 이들은 23일엔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5회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

람회를 참관한 뒤 북한 최대의 IT 연구개발기관인 조선컴퓨터센터를 방문하는 데 이어 24일 김책공대와 정보처리업체 '다코르'를, 25일엔 IT 합영회사 '노소텍'과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를 각각 방문할 예정임. 폴 치아 대표는 "이전에 방북했던 유럽 기업가운데 일부는 북한에서 IT와 BPO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북한과 IT관련 개발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며 "네덜란드의 일부 컴퓨터 게임업체들은 IT 개발의 일부분을 북한의 소프트웨어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말함.

美 한반도전문가 "이 대통령 제안 과감"(9/23)

- 북한 문제 전문가인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협상방식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과 관련,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과감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벡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에 대해 한국을 핵심적인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노력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힘.
- 벡 교수는 "다만 문제는 '원 샷' 방식이냐, 점진적 방식이냐가 아니라 과연 북한이 한국을 중요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 주느냐"라며 "북한이 이에 응할 것이냐는 문제로 들어간다면 북한이 과거부터 한국이 협상 상대가 되는 것에 불편을 느껴왔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함.
- 이어 그는 "미국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미국이 놀랐다'거나,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내용을 봤으나, 그것은 (북·미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나온) '타이밍'의 문제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미국의 입장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말함. 또 그는 이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과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져 한·미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 인식이 일치하는데다, '그랜드 바겐' 자체가 내용상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함.
- 벡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 양자대화가 성사될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협상을 하려는 뜻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아마도 특유의 '살라미 전술'(협상 목표를 잘게 쪼개 그에 상응하는 실속을 챙기는 전략)에 따른 점진적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벡 교수는 워싱턴 D.C.의 아메리칸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최근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 부소장을 맡고 있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로 자리를 옮김. 스트트로브 부소장은 지난 8월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전격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수행, 주목을 끌었음.

<中 언론, 북핵 그랜드바겐에 관심>(9/22)

- 중국 언론이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함.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22일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서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주최한 오찬에서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함.
- 이 대통령은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했고 관련 기사는 포털사이트들에도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음. 중국은 지난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대화 의지를 확인한 것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다이 위원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의했다"면서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함. 장 대변인은 "6자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수단"이라면서 "중국은 각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궤도에 조속히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그랜드 바겐' 제시..북핵 외교전 가열>(9/22)

-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과 관련,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22일 핵심 관련국 사이에 복잡한 북핵 방정식을 풀기 위한 외교전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함. 이 대통령이 지난 20년의 북핵 협상 과정을 비판적으로 관찰한 뒤 '북한이 핵심적인 핵 프로그램을 돌이킬 수 없도록 포기하면 우리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를 주겠다'는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도 한국이 북핵 문제의 핵심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임.
-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 중국도 각각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나름의 복안과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음. 우선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해서는 이른바 '2012년 강성대국론'이 많이 거론됨. 북한 정권을 세운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까지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계획에 입각해 정해진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임. 특히 2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그들이 강조해 온 '공포의 핵 억지력'을 확보한 만큼 경제발전과 인민의 삶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기 위한 국내외 여건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미국과 과감한 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양자 협상 구도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상태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최근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양자와 다자대화' 의지를 천명한 데서도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읽힘.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 비확산체제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모토로 내세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내년 5월로 예정돼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검토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비확산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란과 함께 미국 정부에 가장 큰 위협국가로 부상한 북한과의 핵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물론 오바마 정부는 전임 부시 정부가 진행한 북핵 협상 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6자회담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양보는 하지 않으며 ▲6자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시각이 많음. 결국 양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양자 대화는 상당한 내용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북한 핵은 바로 우리의 실질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함. 이와 관련,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 박사를 인용, 앞으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양자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또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의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도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이 국무위원과 회담에서 언급한 다자회담은 "북, 미, 중의 3자회담"이라며 이는 그가 제안한 게 아니라 "중국이 먼저 제안"했으며 그는 "중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함.
- 이와는 다른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협상구도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회담 틀의 유용성을 유지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으로 읽히고 있음. 게다가 북한이 반세기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 정권을 향해서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할 경우, 자민당 정부와의 차별성을 과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

면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임.

- 이렇게 보면 이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다자 외교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랜드 바겐'을 화두로 올린 것은 한반도 문제의 최대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외교소식통은 "조만간 성사될 북·미 대화 이후 북핵 국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다만 각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며 이 와중에서 보다 실천력있고 현실성있는 방안이 지지를 얻게될 것"이라고 말함.

◎ 玄통일, 대북 인도지원 3대원칙 천명(9/22)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없는 추진'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강화' 등 3대 원칙을 천명함.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함께 나누는 세상'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3대 원칙을 소개함.
- 그 첫 번째인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없는 추진'에 언급, 현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함. 그는 두 번째 원칙으로 '영유아·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들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밝힘.
- 현 장관은 그 세 번째로 '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강화'를 들며 "우리가 지원한 물자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며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 경제난과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건강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말함.
- 현 장관은 이어 "남북의 어린이들은 신장과 체중 등 발육상태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정부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위해 35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한 사실을 언급함.

◎ 오바마 "김정일 꽤 건강..통치력 건재"(9/21)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상당히 건강한 상태며,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NN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난달 방북 결과를 토대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이처럼 판단을 곁들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잦은 교류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를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한때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권좌에서) 멀어지는게 아니냐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 김 위원장은 다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일이 아팠을 때는 후계 문제를 그가 더 우려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아마도 지금은 그가 괜찮기 때문에 덜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오바마 대통령은 또 대북제재와 관련,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의 일부를 실제 적용하도록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연합해 왔으며,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는 성공적인 스토리"라고 말해 관련국들의 일치된 공조 성과를 강조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테이블을 단순히 숟가락으로 칠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세계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도 책임감 있게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어쩌면 생각할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함.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잘만 되면 우리가 그 문제(핵 문제)에서 일부 진전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함.
-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귀국 후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함.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15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우리에게 큰 정보를 줬다"면서 "김정일은 곧게 서 있었고, 힘이 있어 보인 것은 물론 논리적 토론을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대한 그간의 관측이 상당 부분 해소됐음을 시사함.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뇌졸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 올해 초에는 3남 김정운으로의 승계설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음.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건강회복설이 확산되면서, 최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가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北, 퇴역장성 통해 칸 박사에 핵기술 요청"(9/21)**

- 파키스탄 핵확산 스캔들의 주역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과 중국, 이란, 리비아에 핵기술을 제공한 경위를 담은 비밀편지를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일요판이 20일 보도함. 이 서한에는 북한이 칸 박사에게 핵기술 제공을 요청한 경위와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의 액수는 물론, 자신의 첫 번째 고객이 중국이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음.
- 더 타임스는 칸 박사가 핵확산 스캔들로 체포된 직후인 2003년 12월 10일에 독일에 사는 아내 헨니에게 보낸 이 친필 서한의 사본을 자사 기자가 2007년에 입수했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함. 칸 박사는 이 서한에서 북한과 관련, "(지금은 퇴역한 한 장성이) 북한에서 받은 300만 달러를 가져와 설계도와 기계 제공을 부탁했다"고 언급함. 서한에는 설계도와 기계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다만, 칸 박사가 지난해 일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서한에 언급된 설계도와 기계는 원심분리기일 가능성이 큼. 또 칸 박사는 서한에서 자신의 첫 번째 (우라늄) 농축 설비 고객은 과거 파키스탄에 농축 우라늄을 제공했던 중국이었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산시성 한중(漢中)시에 원심분리 시설을 지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핵무기 설계도와 50㎏의 농축 우라늄, 천연 육불화우라늄(UF6) 10t, 3%짜리 6불화우라늄(UF6) 5t을 줬다"고 설명함.
- 우라늄(U)에 불소(F) 원자가 6개 붙어 있는 화합물인 UF6는 천연 우라늄을 가공해 핵무기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생산물임. 그는 이어 이란과 관련해서는 "베나지르 부토 총리의 축복으로…(부토의 국방담당 보좌관이던 퇴역 장성) 임티아즈 장군이 나에게 설계도와 장비 일체를 이란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제공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이란에 줬다"고 언급함.
- 핵확산 스캔들로 지난 2003년 12월 체포된 칸 박사는 이듬해 초 TV를 통해 핵무기 제조 기술을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비밀리에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했음을 시인한 바 있음. 그러나 이후에는 이 발언을 철회함. 당시 그는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긴 했으나 곧바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감.
- 지난 2월에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그에게 '자유 시민'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당국에 외출 계획을 보고하거나 방문객 접견시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정보요원과 경찰이 자택 주변을 감시하는 상태가 계속되자 칸 박사는 법원에 완전한 신변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탄원을 제기함. 이에 대해 라호르 고등법원은 최근 칸 박사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잠정 판결을 내렸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택연금 해제가 보류된 상태임.

<북핵해법으로 부상한 '그랜드 바겐'>(9/22)

- 북한과 미국 간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키워드가 북핵 협상의 수면 위로 떠올랐음. 북한이 '비가역적 핵폐기' 조치에 나서면 그와 동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대대적인 국제지원도 반대급부로 제공한다는 일종의 '빅딜' 개념임.
- 이 같은 구상의 발화점은 이명박 대통령임.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이런 일괄타결 구상이 새로운 것은 아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 개념을 제시했으며 이를 한 단계 구체화한 것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임.
- 이와 함께 '패키지'라는 어감이 '보상'에 치우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통 큰 협상'의 의미를 강조하는 쪽으로 표현도 바뀌었음. 이는 미국과의 적극적 교감 하에 나온 산물로 보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7월말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 에너지.경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힘.
- 더 먼 과거를 돌아보면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도 일괄타결 방식이었음. 다만 이번에는 양자간 합의가 아닌 6자가 동의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름. 그랜드 바겐은 더이상 북한의 '살라미(흥정 대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야금야금 실속을 챙기는 전법)'식 협상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자성론에 바탕을 두고있음. 지금까지는 협상 프로세스를 여러개로 쪼갠 뒤 각 단계별로 합의와 상응조치를 진행시켰으나 그 결과 북한은 핵 폐기를 뒤로 미룬 채 반대급부만 챙기고 나머지 5자는 시간과 돈만 공중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임.
-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 역시 "그랜드 바겐은 단계별 처방과 보상이 되풀이되는 북핵 협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의미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설명함. 한 소식통은 "6자회담의 기본원칙인 '행동 대 행동'으로는 북핵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터잡고 있다"며 "한·미·일·중·러 5자 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이뤄져 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이번에는 협상의 시작부터 최종목표인 '비가역적 비핵화'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포괄적 대북지원 청사진을 통째로 제시함으로써 '원 샷'으로 협상을 속전속결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옴. 그러나 이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그것도 다자 외교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랜드 바겐'을 화두로 끌어올린 데는 또 다른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음. 무엇보다 북·미 양자대화와 다자협상 재개 국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협상의 핵심 어젠다를 선점하고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임.

- 여기에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최대 당사자이자 추후 협상타결시 대북 지원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위치에 있다는 상황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미국에 핵 협상의 전권을 넘기면서 스스로 외교적 소외를 자초하고 결국 대북 경수로 지원비용의 대부분을 떠안고 말았던 94년 제네바 합의 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임.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그랜드 바겐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음.
- 먼저 협상의 현실상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협상의 시작단계부터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비가역적 핵폐기'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임. 이 대통령이 '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할 경우'라고 규정한 대목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물론이고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등 무기화에 필수적인 핵물질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먼저 폐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힘. 핵 폐기의 대가로 지급되는 '당근'이 북한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설지도 미지수임.
-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 안전보장 부분은 이미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데다 북핵 협상의 실질적 키를 쥔 미국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상 현실적 의미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옴. 이에 따라 북한이 적극적 핵포기 의지를 보인다면 일괄타결이 가능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나오면 자칫 협상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자칫 장기 경색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옴. 이는 현재 대화무드를 보이는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아직 '시공도면'이 나오지 않은 '개념도' 수준"이라며 "앞으로 북·미간 양자대화와 5자간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대통령, 방미일정 마치고 귀국(9/26)

- 이명박 대통령이 6박7일간의 미국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음.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 마지막날인 25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내년 11월 제5차 G20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짓고 피츠버그 컨벤션센터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했음.

- 이 대통령은 이어 G20정상회의의 연례 개최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피츠버그 3차 G20정상회의 정상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음.
-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뉴욕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신(新)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고,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핵 대처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했음.
- 또 취임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특화되고 통합된 국제 물관리 협력방안 구축을 제안하고, 북한에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음.
- 이 대통령은 22일 호주, 중국 등 2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제1원탁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NAMA등록부(Registry)'의 설립을 제안했음. 21일에는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공동주최한 오찬 연설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을 제안했음.

정부 "북핵 일괄타결, 한-미간 이견없어"(9/24)

- 외교통상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논란에 대해 양국간 의견의 차이가 없다고 밝힘.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일괄타결 방안은 그동안 한·미간 협의해 온 내용"이라며 "한·미간 아무런 의견 차이가 없으며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
- 문 대변인은 "일괄타결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5자의 상응조치를 한번에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괄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의미한다"며 "한·미 또는 5자간 협의한 포괄적 접근구상, 포괄적 패키지, 패키지 딜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그는 "다만 '패키지'라는 표현이 북한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는 어감이 있는 반면 '그랜드 바겐'은 서로 주고받는 데 강조점이 있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그랜드 바겐'의 개념은 이미 지난 6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이야기"라고 말함. 문 대변인은 내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기간에도 '그랜

드 바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포괄적 상응조치 입장이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방안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5자 사이에는 진전을 위한 매우 폭넓고 깊은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형성돼 있다"고 답함.

-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23일 뉴욕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후부터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며 뉴욕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비롯한 관련국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안, 일괄타결 방안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문 대변인은 전함. 위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기간 스타인버그 부장관을 비롯,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미·북 양자대화'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6자회담 재개 방안, 일괄타결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李대통령,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의미>(9/24)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함. 6.25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불과 한 세기만에 선진국 진입단계에 들어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런 기적의 성취를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와 인류 발전에 한몫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한 것.
- 특히 우리 정부가 핵심 국정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을 설명하면서 '그린 리더십'을 과시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설파함. 다자외교의 상징인 유엔의 '데뷔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유엔과 함께 시작됐다"면서 과거 우리나라와 유엔의 각별한 인연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함.
- 이 대통령은 건국,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열거한 뒤 "이러한 성취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지만 유엔의 지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큰 힘이 됐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1991년 유엔 가입 이전부터 '유엔 데이(UN-DAY)'를 기념해 오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이런 성공적인 현대사를 토대로 개발도상국들과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나서는 등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밝힘.
-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가 기후변화정상회의와 병행 개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의 기여와 역할을 거듭 강조함. 우선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상을 앞두고 '온실가스 의무감축국(Annex 1)'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동협력을 촉구함.

-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Registry)는 개별국가들이 국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축행동을 국제적인 틀에 담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 특히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녹색성장의 새로운 화두로 '물 관리를 위한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제안해 눈길을 끔.
- 서울시장 재임시절 이른바 '청계천 신화'를 이룩한 경험자로서,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도자로서 당면한 국제사회의 환경과제인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정상들을 설득하고 나선 것. 이는 지금까지 온실가스 문제에 주로 한정되던 환경이슈를 한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해온 '그린리더십'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됐음.
-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주장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 지난 21일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공동 주최한 오찬간담회에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전제로 하는 일괄타결 원칙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 비핵화의 당위성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압박함.
-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임할 것이며, 북한도 이런 노력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조속히 동참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함.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인 유엔 개혁문제에 언급, "유엔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롭게 강화된 모습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엔의 개혁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美, 한국 'MD 관심표명국' 분류 배경은>(9/22)

-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한국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구축에 관심을 보인 국가로 분류해 놓은 것은 동북아 MD계획이 추진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MD동참 요구가 거셀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짐. 연합뉴스가 21일 미사일방어국이 지난달 '연례 우주·미사일 방어 회의'를 위해 작성한 2건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보인 국가(Nations expressing interest in Missile Defense)'로 분류됨.
- 미사일방어국은 MD체제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핵심 파트너로 호주,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일본, 영국 6개국을 적시했으며, MD 관심표명 국가로는 한국, 바레인, 프랑스, 독일, 인도, 카타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을 꼽음. 유럽과 중동지역 국가들은 이란 미사일 위협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고,

한국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는 국가로 모두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지목했던 '악의 축'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다만 한국은 그간 미국의 MD참여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사실상 '반대' 또는 '유보'에 가까웠으나, 이번 MDA자료에 '관심표명'으로 소개됨으로써 한국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대목임. 한국의 경우, 지난 200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방미때 미국으로부터 MD참여를 요구받았지만,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과의 관계에도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지금까지도 줄곧 MD체제 참여를 사실상 거부해 왔음.
- 그러던 한국이 '관심표명 국가'로 분류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미 사일방어국이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 시스템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미사일방어국은 가급적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미사일체제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북한의 위협에 가장 근접해 있는 한국의 MD참여를 적극 희망해 왔음. 명분과 상징성에서 한국의 참여가 의미가 있기 때문임.
-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임 정부 시절의 국방·안보관련 정책을 재점검하면서 MD 참여여부 및 참여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에 MD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 '관심표명'으로 적극 해석됐을 개연성이 커보임.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 및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나게 비중이 커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MD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것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
- 오히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D프로젝트와는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 오는 2012년까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MD체제'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음. 그러나 일단 미 국방당국의 공식문서에 한국이 'MD 관심표명 국가'로 이름을 올림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 MD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동참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동유럽MD 계획을 철회했지만, 동북아 MD구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터여서 미·일 중심으로 진행돼온 MD프로젝트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볼 수 있음. 헤리티지재단을 비롯한 미국의 보수진영이 별도의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MD구축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처지임.
-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

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MD 참여는 한국정부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임. 다만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유럽 MD 계획 철회 발표로 MD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 상태여서 동북아 MD구축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은 한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보임.

○ 李국방 "한·미, 동북아 안정 위한 버팀목"(9/22)

-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2일 퇴임을 앞두고 환송의 의미를 담은 한·미연합사령부 장병들의 사열을 받았음. 한·미연합사는 한국 국방장관 퇴임 시 예우 차원에서 직접 열병의식을 해왔음. 이 장관은 이날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주관으로 연합사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환송의장행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과거와 현재 함께 싸워왔고 미래에도 함께 싸울 진정한 전우"라며 "양국은 동북아 안정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말함.
- 그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힘은 첨단무기체계 때문만이 아니라 양국간 무한한 신뢰와 우정에 기초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한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양국 군의 헌신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 장관은 이어 "국방장관을 마치더라도 한·미동맹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함.
- 샤프 사령관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참군인이자 진정한 관료였던 이 장관에게 이제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며 "이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한·미연합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데 직접 관여해 적보다 수준 높은 우위를 확보했다"고 이 장관에 대한 예우를 갖췄음.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2년 4월17일 예정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제, "이날 우리는 대한민국 군이 한국 방어를 책임질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한·미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한·미 외무 "북핵 대처 5자 긴밀 협력"(9/22)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을 포함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5자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유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가진 클린턴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북핵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도 5자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유 장관은 이번 유엔 총회기간 북한측 대표인 박길연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카운터파트간 북·미 양자 회담을 앞둔 사전 접촉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이날 회담에서는 또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 동맹 재조정 사업 및 G20 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함.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제2차 밀레니엄 프라미스(Millennium Promise) 연례 파트너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밀레니엄 프라미스는 아프리카 지역 MDGs 달성을 위해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와 자선사업가 레이먼드 챔버스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기구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및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10개국 80여개 마을에서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 (Millennium Villages Project)」을 수행 중임.

나. 한·중 관계

<한·중 정상, 북핵·경제 '긴밀공조' 공감대>(9/24)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23일(현지시간) 뉴욕 정상회담은 양국간 '협력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동북아 정세안정 등과 관련, 양국 정상이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은 최근 남북관계가 중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큰 성과로 평가됨. 아울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상호 긍정평가하는 한편 내년 우리나라의 '제4차 G20 정상회의' 유치에 후 주석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도 최근 양국간 관계증진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으로 해석됨.
- 이날 오전 뉴욕시내 한 호텔에서 40분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의 덕담으로 시작됨.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핵문제에 언급,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수행해온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 뒤 "(경제가) 어려울수록 (양국이) 더 발전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이에 후 주석도 "그동안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면서 "국제 및 지역문제도 양국이 훌륭하게 조율해왔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강조함.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간 두 정상은 논의의 대부분을 북핵문제 해법에 할애함.
- 먼저 후 주석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제 및 지역정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양국간 전략적 의사소통과 호혜적 관계를 강화해서 양국의 실질적 관계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이 향후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됨.

- 특히 이날 회담에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배석해 방북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측이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핵공조'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이에 이 대통령은 '당당하고 의연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도 언급함. 또 이번 뉴욕 방문중 북핵해결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랜드 바겐'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중국과 이에 대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방안도 이날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됨. 후 주석은 중국의 재정확대정책, 통화정책 등 경제회생 노력을 설명했으며, 특히 G20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와 내년 제4차 G20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경기회복이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내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되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함.
-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 박인국 주 유엔대사,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위성락 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중국측에서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링지화(令計劃) 당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沪<水+扈>寧) 당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양제츠(楊潔지<兼대신 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등이 배석함.

다. 한·일 관계

○ 韓日 재무 "亞 통화협정 다자화 협력"(9/25)

-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아세안'의 통화스와프협정 다자화 작업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5일 보도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일본 재무상은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다자간 협정으로 진전시키는 작업에 적극 협력하자는 데 견해를 같이함.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이 역내 외환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통화교환협정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참가국들은 지난 5월 양자협정을 다자화하기 위한 공동기금 확대에 합의하고 역내 경제감시기

구와 채권에 신용보증을 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를 설립하기로 함. 한국은 CMI 공동기금 1천200억 달러 가운데 16%인 192억 달러를,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를 부담하며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함. 두 나라 재무장관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제안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관련, 재정·금융분야에서도 이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함. 한국은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한 바 있음.

李대통령 "한-일 새관계 만들 준비돼있다"(9/24)

-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북핵 공조에 대해 협의함. 지난 16일 하토야마 총리 취임후 처음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노력해나가자"면서 "하토야마 총리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배석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함.
-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민주당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힘.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 "한·일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양국간 문제뿐 아니라 세계와 아시아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면서 "경제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핵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조해나가자"고 말함.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긴밀한 공조를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함. 하토야마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시아 비핵화는 물론 나아가 좀 시간이 걸려도 세계 전체가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자"면서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 이웃나라로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국제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 이 대통령은 "일본이 세계 일류의 경제력 갖고 있으면서 핵을 갖고 있지 않아 전세계 비핵화 주장할 자격이 있다"며 "지금 북한이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국제사회가 공조해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북·미 양자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힘.

라. 미·중 관계

美국가정보국장 "中, 강남1호 문제 때 도움"(9/21)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미얀마(버마)로 향해 하던 중 미 군함의 추적 끝에 회항한 북한 화물선 강남1호 문제 발생 당시 중국이 미국에 도움을 줬다고 밝힘. DNI가 20일 공개한 블레어 국장의 지난 15일 캘리포니아 '커먼웰스 클럽' 강연 녹취록에 따르면 블레어 국장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강남 1호와 관련해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고 말함.
- 블레어 국장은 특히 강남 1호를 설명하면서 "버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함. 당시 무기를 실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 1호의 최종 행선지를 두고 미얀마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블레어 국장은 이어 시리아에 건설 중이던 핵시설의 북한 지원설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상당한 기밀사항"이라면서 답변을 피함.
- 그는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을 지적하면서 핵확산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함. 또 북한 등에 핵기술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 조직을 거론하면서 "무기 거래의 암흑가가 있다"고 지적함.

오바마-후진타오, 북한문제 대처 논의(9/23)

- 유엔 총회에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미국과 중국 정상이 22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양국 간 타이어 분쟁 해결 방안,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맨해튼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과의 진정한 협력과 포괄적인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양국관계를 더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후 주석은 미국과 21세기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양국 관계가 반드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미국과 적절히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답함.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날 북한 문제와 기후변화, 세계 경제회복, 무역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논의했다고 설명함.
- 그는 "특히 타이어 분쟁 문제가 제기되자 중국 측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가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가지 특정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후 주석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지난 11일 중국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3년간 3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는 한편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 무역분쟁이 확산됐었음.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만남은 지난 4월 1일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임. 오바마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오는 11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마. 미·일 관계

○ 美·日정상 "北核 6자회담서 긴밀협력"(9/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신임 일본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일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천명하고 양국간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함.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가진 회담에서 미·일 양국 동맹이 양국 안보의 토대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와 경제위기, 지구온난화, 핵 군축 등의 사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키로 함.
-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봉쇄하는 협상에는 6자회담의 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하토야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미·북간 양자대화가 이뤄지면 그 결과가 6자회담에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함.
- 하토야마 총리는 또 대미 관계는 자신의 외교정책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면서 "미·일 동맹은 여전히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고 강조함. 하토야마 총리는 그동안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리즘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음.
-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 선거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뒀고 일본에서 극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화답함. 오바마 대통령은 "총리의 성공이 20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도 굳건하게 유지될 미·일간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함.
-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그의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함.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 일본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도출하는데도 협력하기로 함.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내 미군 재배치 문제나 일본의 아프간 지원수위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美·日 외무 회담..동맹 중요성 재확인(9/22)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신임외상은 21일 저녁(현지시간) 뉴욕에서 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클린턴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에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미국 외교정책의 초석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이날 미·일 외무장관 회담은 일본의 여야 정권교체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미·일 관계에 있어 이전 자민당 정권에 비해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열려 특히 주목을 끌었음.
- 신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일 정상회담에 앞선 의견 조율의 성격도 띤 이번 회담에서는 현안인 주일미군 재편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아프가니스탄 부흥 지원 등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 핵탑재 함정의 일본통과 묵인 등 양국간 핵 밀약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음.
- 오카다 외상은 회담 후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문제를 포함한 주일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재협상의 의사를 전달함.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양국 외무장관이 회담에서 미군의 재편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그는 "일본의 새 정부는 (미군재편) 계획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 국무장관이 협의를 계속하고 그들의 의문에 답하기로 했다"면서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지만, 어디로 향할지는 현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함. 미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일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미국은 자민당 보수 정권과 몇달전에 타결했던 미군 재편안을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미·일 양국은 수년간의 협상 끝에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 현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미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등의 재편계획에 합의함. 그러나 오키나와 현지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원을 받으며 미군의 완전 철수를 주장해 왔음. 클린턴 장관과 오카다 외상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를 수행중으로, 미·일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일본의 새 정권 출범후 첫 정상회담을 갖음.

"美日 핵밀약 '밀약'아닌 日의 묵인"(9/21)

- 일본이 사실상의 국시인 '비핵 3원칙'을 깨고 미국과 핵무기의 기항·통과에 합의했다는 이른바 '핵 밀약'은 '밀약'이 아니라 미·일 안보조

약의 해석상 차이를 일본이 묵인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함. 아사히신문은 지난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과 함께 시작된 '사전협의제도'에서 일본은 당초 핵무기의 기항·통과를 사전협의대상이라고 이해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전함.

- 하지만 일본은 그 후 사전협의대상과 관련한 해석을 미국 측에 맞춰 핵무기의 기항과 통과를 묵인, 지난 1968년부터 사실상의 국가 방침으로 굳어진 비핵 3원칙의 '핵반입 금지' 조항을 처음부터 무력화시켰다는 것임.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임.
- 일본 정부는 핵 반입 등과 관련 사전협의제도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국회 등에는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핵 밀약은 없다'는 종래의 답변을 되풀이함. 외무성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의 기항·통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면 돌파론'이 몇 차례 부상했으나 내각 붕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됨.
- 아사히신문은 외무성에서 미·일 안보조약과 사전협의제도를 다뤘던 전 간부 6명을 만나 취재한 결과 '핵 밀약'의 경위가 이렇게 드러났다고 밝힘.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핵 밀약은 ▲일본 정부가 사전협의제도의 해석상의 차이를 미국 측의 해석에 맞추는 식으로 묵인했고 ▲ 이 때문에 미국 핵의 기항·통과가 계속됐으며 ▲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계속 은폐해왔던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결론지었음.
- 1950년대부터 핵의 일본내 기항·통과를 자유롭게 하고 있던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개정당시 도입된 사전협의제도에 대해 '미 해군 함정의 일본 영해와 항만 진입과 관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 '토의기록'이 남아있으나 현재 극비 취급되고 있음. 미국 측은 이 토의기록을 근거로 핵의 일본내 기항과 통과가 사전협의제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후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입장이 되지 못했고 결국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임.

○ <日 오키나와 미군기지 '뜨거운 감자'>(9/21)

-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해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미·일 군사 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가 첫번째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다마키 데니(49) 일본 민주당 초선 의원.
- 일본인 어머니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었던 아버지를 둔 다마키 의

원은 “나만큼 미군기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며 미군기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 음악과 영화 애호가로 라디오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을 “오키나와의 전후 역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미국과 일본이 거리를 좀 더 넓힐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함.

- 오키나와 미군기지에는 일본 주둔 미군 4만5천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머물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2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음. 다마키 의원은 미군 기지를 빌미로 정부 지원금이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 개발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지 산업도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그는 “우리는 미군기지에 의존했던 데서 벗어나 독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철도를 새로 깔아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함. 지난달 30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집권한 민주당은 미·일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며, 일본 내 미군 주둔에 대한 기존 합의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음.
-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기세를 조금 누그러뜨렸다가 공식 출범 이후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나섬.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은 지난주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 비행장 문제가 연내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내놨음.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신임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양자 관계는 여전히 일본 외교 정책의 근본이 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급격한 변화를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우리는 우리가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미군기지 문제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오키나와 주민 사이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면 현지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음.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나카마 키요미츠(60)씨는 “우리는 모두 미군기지가 여기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다”라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위해 미군기지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 없이 지역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함.

바. 미·러 관계

○ 미·러 정상 “이란 추가 제재” 경고(9/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란이 핵무기 개발노력을 계속한다면 추가적인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함. 그는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에 대해 이란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심

각한 추가 제재가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설명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의사가 있지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가 생산적이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말해 이란 제재에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을 보임. 그는 "이란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면서 "우리는 이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러시아는 그동안 이란에 대해 핵 투명성을 강조해왔지만 대 이란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과 함께 반대 입장을 보여 왔음.

○ 미-러, START-1 후속협정 6차 협상 개시(9/21)

-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마련을 위한 6차 협상을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함. 제네바의 한 외교관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 제네바에 있는 러시아 대표부에서 협상이 시작됐으며, 3~4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이달 초 열렸던 협상은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열렸으며, 이번 협상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됨.
- 로즈 고테묄러 미 국무부 검증·군축 차관보와 아나톨리 안토노프 외무부 안보·군축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의 협상 대표단은 START-1 시한 만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이번 협상에서는 처음으로 최종 협정서에 들어갈 세부 조항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짐.

사. 중·일 관계

○ 하토야마 "침략사죄 무라야마 담화 계승"(9/23)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2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함. 하토야마 총리는 중국과의 상호 입장차를 넘어설 수 있는 외교, 입장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가 '우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함.
-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 15일 열린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에서 당시 총리였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가 태평양 전쟁과 전쟁 이전에 행한 침략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명한 담화임. 하토야마 총리는 또 상호 입장차를 인정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싶다고 말함.

-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대해 ▲수뇌 레벨의 왕래를 늘리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제·무역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아시아와 세계 규모의 문제에 대해 협력하면서 ▲양국간 견해의 차이는 대국적 시야로 해결해 가자는 5개항을 제안함.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은 두나라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데 인식을 함께했으며,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과 관련 하토야마 총리는 "(동중국해가) 우애의 바다가 돼야한다"면서 공동개발을 위한 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평화우호협력의 바다로 하고 싶다. 대국적 견지에서 올바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화답함.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 후진타오 주석은 하토야마 총리가 밝힌 온실가스 25% 삭감의 중기 목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평가한다'고 밝힘.
-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했고, 하토야마 총리는 "티베트의 지위는 국내의 문제이지만, 가능하다면 대화에 의한 해결을 바란다"고 '대화'를 강조함.

아. 중·러 관계

○ 중·러, 동북·극동지방 공동개발 추진(9/24)

-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중국의 동북 지방과 러시아의 극동지방 공동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관영 신화통신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양국이 비준한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의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보도함.
- 후 주석은 "이 협력 방안은 양국의 국경지역을 공동개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가 성숙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러시아는 양국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함.
- 이 계획은 양국이 국경지방의 교통과 물류, 시장 등을 공동개발하고 교량과 도로,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도 협력하는 한편 기술개발, 프로젝트 투자, 인적교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금융위기 이후 서방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최근 에너지 및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후 주석은 "양국은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와 금융위기 공동 대응, 경제 무역 등 각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최근 신장(新疆)위구르 시위 사태 처리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

국 정부에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함. 통신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와 이란 핵문제 등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러,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에 임대설 논란(9/22)

- 러시아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의 일부를 중국에 장기 임대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시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음.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주간 신문인 '콘쿠렌트'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시 정부가 2개 구(區)를 75년 간 중국에 임대해 주는 대가로 1천300억~1천500억 루블(430억~500억 달러)을 중국으로부터 투자받을 것을 건의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회·경제연구소인 네온치예프가 블라디보스토크 시 정부의 의뢰로 작성한 '2020년 전략발전 방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힘. 시 정부 관계자로부터 건네 받은 이 보고서는 만주어로 '하이션와이(海蔘巍.바닷가의 작은 어촌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별칭)'라는 별도 제목까지 달려 있으며, 2개 구를 중국에 임대해 주고 하얼빈(哈爾濱)시 직속의 중국 행정기구 및 세관과 국방수비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이 신문은 전함.
- 현지 인터넷 매체인 '프리마 미디어'는 이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시 정부가 중국 자금을 끌어들여 도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함. 그러나 중국인들의 활발한 극동지역 진출에 예민해져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주민들 사이에서, 시 정부가 개발자본 유치를 위해 중국에 도시를 팔아먹는 격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시 정부가 진화에 나섬.
- 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도시 일부를 임대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누군가 꾸며낸 얘기"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함. 이고르 푸시카료프 블라디 시장도 기자들에게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블라디보스토크는 여전히 러시아의 도시일 뿐"이라며 "그런 계획을 마련한 바 없다"고 주장함.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22일 관련 내용을 실으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시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고 보도함.
- 한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의 극동 접근을 경계하는 마당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영토 일부를 그런 형식으로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발전 계획은 이미 러시아 중앙 정부의 극동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으며, 연구소의 용역 결과가 마치 시 정부의 확정안처럼 알려지면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지적함.

자. 일·러 관계

○ 러·일 정상회담 "영토분쟁 해결 노력"(9/24)

-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러시아와 일본 정상이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3일 유엔본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는 일본과 상호 협력은 물론 가장 민감한 문제까지도 기꺼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이에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50년이 지나고 나서도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나라에 마이너스(-)"라며 "영토 문제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한다"고 답함. 러·일 양국은 쿠릴 열도에 대한 점유를 놓고 갈등을 빚어 2차대전 종전 후 상호 평화조약을 맺지 못했음. 쿠릴 열도는 1945년 구 소련군이 진주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유해옴.
- 메드베데프는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영토분쟁을 미래 세대의 과제로 남겨둘 의도는 없다면서 지도자들이 결심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음. 한편, 일본 관리들은 두 정상이 영토분쟁을 포함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외무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사할린과 시베리아의 에너지자원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함. 두 정상은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다시 회동하기로 함.

차. 기타

○ 안보리 '핵 없는 세상' 결의 채택(9/25)

-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핵없는 세상' 구현을 위한 핵무기 확산 근절 결의안을 통과시킴. 이날 핵군축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회의 개막 직후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1887호를 표결에 부쳐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음을 선언함.
- 채택된 안보리 결의는 "NPT의 목적에 부응해 핵무기가 없는 세계 환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세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핵무기 확산 금지와 핵군축 가속화, 핵 테러리즘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음. 이번 결의는 '핵 없는 세상' 구현을 공언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중·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내년 4월 NPT 체제 강화를 위한 핵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
- 이날 안보리 정상회의는 1946년 안보리 창설 이후 5번째로 열리는

안보리 차원의 정상급 회의로 미국 정상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임. 특히 결의 내용 가운데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구체적 지칭은 없었지만, 핵확산 금지에 대한 도전을 비난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함으로써 이들 핵 야망국가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됨.

- 오바마 대통령은 결의안 채택 직후 연설을 통해 "이 역사적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이라는 우리가 공유해온 약속을 명문화 시킨 것"이라면서 "우리가 추구해온 핵 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의 광범위한 틀이 안보리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주요 도시에서 터질 경우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4년 이내에 모든 위험성 있는 핵물질을 제거하는 전세계적 노력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어 "이 결의안은 어떤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법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고 조약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해, 이란·북한의 핵 보유 야망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함. 결의안 채택 후 발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등은 모두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며 '안전한 세상의 장애물'로 꼽았음.
-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용기를 갖게 된다면 핵 군축과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더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 이행을 촉구함.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비핵보유국에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며 미·영·프 등과는 다소 초점을 달리함. 결의안 채택 후 반기문 사무총장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함.
-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미디어 재벌 테드 터너, 샘 넌 전 미 상원의원 등 핵 비확산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음.

○ 日총리 "北核 어떤 상황서도 용서 안돼"(9/25)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은 북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함. 취임후 첫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에 복종하고 국제 공동체가 이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은 의무"라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선거 기간에 '자민당 집권 수십년 동안 일본의 외교정책이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해온 하토야마 총리는 또 "일본은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핵군축의 프로모터가 될 잠재

력을 갖고 있다"며 핵군축 중재역을 자임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리 핵군축 정상회의에서 '핵없는 세상'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행한 이 연설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과거 일본이 핵 공격의 유일한 희생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핵보유국들에게 핵군축으로 나아갈 것을, 비보유국에게는 핵무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을 지닌 국가"라고 강조함.

○ 캄보디아서 日-메콩유역국 외무장관회의(9/24)

- 일본이 메콩강 유역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만든 '일본-메콩 유역국 외무장관회의' 2차 회의가 다음달 캄보디아에서 개최됨. 캄보디아 외무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시엠립에서 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및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일본-메콩 유역국 외무장관회의가 열린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참석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일본-메콩 유역 동반자프로그램'과 지난해 도쿄(東京)에서 처음 열린 일본-메콩 유역국외무장관회의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성명은 덧붙였음. 한편 일본은 중국이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메콩 유역국들과의 파이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무기로 추격에 나선 것으로 외교 관측통들은 분석함.

○ 오바마 "북한·이란 핵 야망 전세계 위협"(9/2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사회를 '위험한 비탈'로 끌어내리려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두 나라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그러나 "국제법은 공허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보여 줘야 한다"며 동아시아와 중동을 위협하는 이들의 핵 야망에 대해 경고함.
- 그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이란·북한)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들이 의무를 다한다면 양국의 번영 및 평화의 길을 열 외교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설명함.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지역안정과 안보, 자신들의 기회만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을 고조시키는 행위의 위험을 망각한다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는 특히 "세계가 협력해 조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미래가 '공포'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노력을 통해 알 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에 상응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나라들과 공동의 길을 갈 것”이라며 “새로운 참여의 시대에 국제사회도 동참해 달라”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세계가 미국을 비관과 불신으로 바라보던 시기에 취임했지만, 이중 일부는 오해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각 국가와 국민의 이해가 공유되고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함.
-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의 이익과 다자의 존중에 근거한 새로운 참여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핵군축, 평화와 안정 추구, 지구 보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지구촌 경제를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대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국제 협력의 원칙에 의해 이끌려 가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그동안 유엔을 통해 진행해온 인권과 새천년개발계획 등을 언급한 뒤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미국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세계가 가진 문제에 대응하는 책임을 우리가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함.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동평화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정착촌의 합법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에 대한 선동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이와 함께 피츠버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균형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의 주범인 과도한 탐욕을 종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李대통령, 유엔서 ‘그린 리더십’ 과시>(9/23)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의 제1원탁회의 첫번째 주재자로 나서 회의를 선도 진행함.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비전으로 내놓으며 전세계의 ‘녹색’ 흐름을 주도한 이 대통령이 전세계 10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국가별 그룹의 의장이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은 것.
- 특히 공교롭게도 제1원탁회의의 두 번째 주재자로 이 대통령과 가장 친분이 두터운 외국정상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선정돼 더욱 눈길을 끌어옴. 이 대통령과 러드 총리는 오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동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유엔본부 2층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후변화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유엔본부 원탁회의장으로 향함.
-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는 모두 8개의 원탁회의가 구성됐는데,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총 27개국이 참석하는 제1원탁회의를 첫 주

재하는 영예를 안았음. 제1원탁회의에는 공동 의장국인 우리나라와 호주를 비롯해 중국, 체코, 지부티, 가봉, 그레나다, 헝가리,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네팔,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와질랜드, 태국, 마케도니아,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우루과이, 잠비아 등 대륙별 국가들이 총망라됐음.

- 참가국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성장으로의 전환방안'이라는 기본주제를 놓고 2시간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유엔측에서는 아샤 로스 미기로 사무부총장 등이 전체 원탁회의를 순회함. 정상들은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방안과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적응 방식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함.
- 특히 ▲선진국의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발도상국의 감축행동 ▲개도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 지원 ▲개도국 지원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 등 '5개 정치적 핵심사안'에 대한 진전 확보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이 대통령은 원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언급하며 참석한 정상들에게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건설적 토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이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이 자리를 마련한 데 대해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이어 이 대통령은 별도의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그린카 등 이른바 '전환적 기술(transformational technology)'의 개발을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밝힘.
-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유엔본부 4층에 마련된 기후변화 주요국 업무만찬에서도 녹색성장을 주도한 정상으로서 별도의 발언기회를 얻은 것으로 전해짐.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1980년대 IT(정보기술)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는 GT(녹색기술)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함.

"中 국경절에 6대 신형무기 공개"(9/23)

- 중국이 오는 10월1일 열리는 건국 60주년 국경절 열병식(군사퍼레이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젠(殲)10 전투기를 비롯한 6종류의 신형 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짐.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국경절 열병식에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젠 10, ZTZ 99 탱크, 항속거리 8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쥐랑(巨浪) 2호, KJ 조기경보기, 즈-10 함재용 헬기, QBZ-95 소총 등 6가지 신무기를 공개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 중국의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

문사를 인용해 보도함.

- 중국신문사의 이 같은 보도는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지난 21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주에 군사위성이 있고 하늘에 젠 10 전투기, 육지에 최신 미사일과 탱크, 그리고 바다에 신예 구축함 등이 포진하고 있다고 밝힌 직후 나온 것임. 이에 앞서 열병식 책임자인 팡펑후이(房峰輝) 베이징군구 사령관은 지난 16일 열병식에서 조기경보기를 포함해 신형 미사일, 신형 탱크 등 최소 52종류의 첨단 무기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팡 사령관은 "열병식에 선보이는 무기들은 모두 중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생산한 것"이라면서 "상당수의 무기들이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함.

中, 해상영토주권보호법 제정 검토(9/23)

- 중국이 해상 영토 주권을 놓고 이웃국들과 벌이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영토주권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 신춘잉(信春鷹)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22일 "동해와 남중국해 해상영토 주권분쟁 문제를 놓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힘. 신 부주임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해상영토주권보호법을 제정한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학자들이 제안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함.
- 중국은 지난 5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해상 영유권 신고 마감을 앞두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이웃국들과 치열한 분쟁을 빚어옴. 중국 해양국 해양발전전략연구소는 최근 '2009년 중국해양발전보고서'에서 보하이(渤海) 등 내해를 제외하고 황해, 동해, 남해 모두에서 해상영토 경계, 무인도 주권, 자원 분쟁이 있다고 지적함. 보고서는 또 중국의 해양권익 보호에 커다란 공백이 있으나 중국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 없다면서 해양도서보호법 제정을 건의함. 이에 앞서 필리핀은 지난 2월 남중국해의 난사(南沙) 군도와 황옌다오(黃岩島)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영해기선법안을 제정해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음.

"中, 이란에 휘발유 수출..美 제재에 걸림돌"(9/23)

- 중국 국영 기업들이 이달부터 이란에 휘발유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이란에 연료 공급을 차단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 등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함. 이란의 구매 활동에 정통한 석유 거래업자 및 은행원들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 기업들은 중개지를 거쳐 이란에 휘발유를 팔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물량이 이란의 일일 수입량 중 3분의 1 수준까지 늘어남.
- 미국은 이란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이란에

연료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석유회사인 BP와 인도의 릴라이언스 같은 기업들도 이란에 휘발유 공급을 중단함. 이란은 그러나 해외 기업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한 데 따라 부족해진 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휘발유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휘발유 판매는 아직 이란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소지는 없다고 거래업자들은 말함.

- 이란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지만 정유 시설이 부족해 휘발유 같은 석유 정제품은 수입에 의존해 왔음. 워싱턴에 있는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이란과 정상적인 무역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유엔 제재의 범위 안에서 거래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유엔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정부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매우 일관되고 분명하다"면서 "중국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JP모건의 로런스 이글스는 "시장에서 듣는 정보를 토대로 추산하자면 하루에 중국 휘발유 3만~4만 배럴이 중개지를 거쳐 이란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이란의 일일 휘발유 수입량은 12만 배럴에 달함.

반 총장, 하토야마 총리와 회담(9/23)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2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해 확고한 태도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일본 관계자가 밝힘. 하토야마 총리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시아 출신 사무총장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유엔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함.
- 반 총장은 이에 대해 "북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 하토야마 총리의 취임 후 첫 양자 대면인 이날 회담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지구 온난화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음. 반 총장은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밝힌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삭감키로 한 중기 목표에 대해 "총리의 지도력에 의한 것으로, 회원국들로 부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높게 평가함.
- 하토야마 총리는 "인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며 협조를 재확인함. PKO활동과 관련, 반 총장이 유엔의 분쟁예방과 평화 구축을 위한 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데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의 PKO에 대한 인적 공헌이 충분하지 않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中 "4중전회, 시진핑 인사 논의 없어"(9/22)

- 중국 공산당이 22일 제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선출 등 인사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힘.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이날 외신을 상대로 4중전회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번 회의에서 인사 변동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시 부주석의 인사 문제는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대외연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당내 민주화와 부정부패 방지책 등 공산당의 건설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함. 실제로 지난 18일 회의 폐막 직후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된 회의보고서(공보)에도 공산당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시 부주석 등 인사 안건은 포함돼 있지 않았음.
- 그러나 홍콩 언론과 외신들 사이에서는 '시 부주석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하는 안건이 원칙적으로 통과됐고 건국 60주년 행사가 끝난 뒤 발표될 것'이라는 설과, '선출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시기가 적절치 않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등의 각종 설이 분분했음. 이런 가운데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이날 직접 인사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못박음에 따라 이같은 논란은 수그러질 것으로 보임.

제3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28일 개최(9/22)

- 제3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 오카다 가쓰야(岡田 克也) 일본 외무대신은 이번 회의에서 내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 관련사항과 3국간 협력사업,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07년 6월 제주, 지난해 6월 일본 도쿄에서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임. 다음 회의는 내년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됨. 유 장관은 이번 회의기간인 29일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유 장관은 이어 29일 곧바로 일본을 방문, 오카다 외무대신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정·관계 인사 등을 만난 뒤 다음날 귀국함.

中 후진타오 후계 선출 3대 시나리오(9/22)

- 중국이 향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후계자를 복수의 후보자간 경쟁(경선)을 통해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 17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55) 국가부주석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안건이 통과됐는지 여부를 놓고 홍콩을 비롯한 서방 매체들간에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오는 2012년 후 주석의 뒤를 이을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방식과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음. 첫 번째 가능성은 교황 선출방식과 유사한 방식임. 즉 공산당 최고 지도부 또는 이너서클의 합의에 의해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방안임. 이는 1990년대 최고 실력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중국의 3세대 지도자로, 후 주석을 제 4세대 지도자로 각각 선택할 때 적용한 방식임.
- 1989년 6월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인 5월 하순 덩샤오핑 중앙군사위 주석, 천윈(陳雲)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셴녠(李先念)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 중국정치를 주도한 '중난하이 3인 원로'은 비밀회동을 통해 시위대에 동정적이 태도를 보이다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의 후임으로 장쩌민 당시 상하이 당서기에게 권력을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중국의 최고지도자 결정과 관련해 상정할 수 있는 두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아 권력투쟁이 심화되는 상황임. 홍콩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제 17기 4중전회에서 시 부주석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던 점에 비춰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 후 주석의 후계자를 누구로 결정할 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관측하고 있음.
- 홍콩 시티대학의 조지프 청 교수는 "공산당 지도부나 이너서클 내부에서 아직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를 누구로 결정할 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함. 이 같은 관측이 사실일 경우 향후 중국 권력층 내부에서 차지 지도자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투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시나리오는 복수의 후보자간 경쟁을 통해 차기지도자 선출 방식임. 베이징 이공대학의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후 주석이 '당내 민주주의 확대'를 주요 정치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과정에서 베트남 공산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선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베트남의 경우 최고지도자인 공산당 서기장을 당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선출함.
- 중국에서도 2006년 7월 '황푸핑(皇甫平)'이란 필명으로 유명한 개혁파 저우루이진(周瑞金) 전 런민(人民)일보 부총편집장이 인터넷에 "중국 공산당도 베트남처럼 경선을 통해 총서기를 뽑자"는 파격적인 글을 올려 파문이 인 바 있음. 현재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보면, 공산당 중앙위원의 경우 후보자가 선출자보다 다소 많은 '차액(差額)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총서기를 비롯한 정치국원과 상무위원, 성(省)의 서기의 경우 찬반만 묻는 '등액(等額)선거'를 통

해 선출됨.

- 후 교수는 만일 중국이 오는 2012년 열리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전대)에서 총서기를 경선을 통해 선출할 경우 시진핑 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간 양자 대결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시 부주석의 경우 장쩌민 전 주석을 비롯한 '상하이방'에서 미는 인물이며, 리 부총리는 공청단 출신인 후 주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음.
- 이밖에 홍콩의 정치분석가들은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서기, 위정성(俞正聲) 상하이(上海)시 서기를 비롯해 최근 '범죄와의 전쟁'으로 주가가 높아진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당 서기 등을 총서기 경선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권후보'로 꼽고 있음. 후 교수는 만일 중국 공산당이 제한적인 방식이지만 경선을 통해 선출하게 될 경우 공산당은 물론 중국 전체의 국익이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 공산당이 이 같은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최고지도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정비할 것으로 중국과 홍콩의 정치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중국 런민대학의 장밍(張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함.
- 한편 중국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문제와 관련, 홍콩의 명보(明報)는 17기 4중전회에서 시 부주석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안건이 사실상 통과됐다고 보도한 반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은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선출되지 않았다고 상반된 관측을 내놓은 바 있음.

러, 동유럽 미사일배치 계획 폐기설 부인(9/21)

- 러시아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계획 철회에도 불구, 폴란드 접경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21일 밝힘.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러시아가 미국의 동유럽 MD 계획의 대응책으로 마련한 폴란드 인근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하겠다는 보도와 관련, 이같이 말함.
- 앞서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언론들은 미국의 MD 계획 철회가 발표된 이후 러시아 역시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함. 그는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알려진 것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며 이는 정치적 문제로,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잘라 말함.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가진 이번 인터뷰에서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미국이 MD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기반으로 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참고1] 〈李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연합뉴스, 9/24)

▲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우선, 알리 압두살람 트레키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의 지도력 아래 이번 총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유엔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감사와 지지의 뜻을 전합니다.

<유엔이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나는 먼저 대한민국과 유엔의 각별한 인연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유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지켜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의 감시하에 민주적인 선거를 치렀고, 유엔의 승인에 따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습니다.

건국한 지 2년만에 일어난 6·25 전쟁에는 유엔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전했습니다.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조성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에는 11개국의 6.25전쟁 전사자들이 묻혀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국민들이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불과 한 세대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지만, 유엔의 지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1년 유엔가입 이전부터 '유엔 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와 인류에 적극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개도국들이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발전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발전모델을 찾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빈곤을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G20 트로이카(Troika) 공동 의장국으로서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한국인의 복리(福利)가 인류의 복리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 이행공약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특히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0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간다는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1년 서울에서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5년 MDG 달성 등을 위한 원조효과 제고와 함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개국에서 3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IT, 의료, 농업기술, 거버넌스 개발 경험 전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을 통해 테러방지와 국제평화 증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이미 세계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세계 각국의 상선을 보호하는 다국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분쟁예방과 대테러 임무, 재난대비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더욱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의 선도국가>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이나 개도국들도 힘을 모아야 하는 인류공동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 끌어올리고 국제적 공동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사회는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며, 어제 이 자리에서 코펜하겐에서의 성공을 위한 다짐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유도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내에 '등록부(registry)'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부속서 I 국가'(Annex I)는 아니지만 2020년까지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연내에 발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같은 제안과 노력이 코펜하겐에서의 협상타결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아울러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이자 발전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양식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녹색 분야에 매년 GDP의 2% 정

도를 투입할 것입니다. 이는 유엔에서 권고하는 녹색투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당면한 기후변화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녹색분야에 과감한 재정지출을 실시하는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의 개발과 국제협력은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난 7월 G8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전환기술 선도국가로 지정된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포함하여 녹색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을 온 인류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화석에너지는 대체가 가능하지만, 물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의 필수적인 요소인 물 문제에 대해 의장과 각국 정상 그리고 사무총장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세계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도 대부분 홍수와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물 관련 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들을 검토했는데,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깨끗한 물의 공급과 홍수와 재해를 예방하는 정책과 인프라의 개발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담수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수십년간 콘크리트로 뒤덮인 건천이었던 청계천의 복원은 천만이 넘는 시민들에게 하천이 흐르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기온상승(heat island) 현상을 극복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친환경 녹색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성과는 한국을 동서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강들을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어져 용수 확보와 홍수 조절의 근본책을 마련함은 물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간 20여 개의 유엔 국제기구들이 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파급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특화되고 통합된 물관리 협력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 비확산과 한반도>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보는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오늘날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려면 핵비확산조약(NPT)등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강력한 의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작년 10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핵군축 5개항 제안(five-point proposal for nuclear weapons)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을 주창하였습니다. 인류의 염원과 희망을 담고 있는 이러한 구상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구상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가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도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임할 것이며,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합니다. 1992년 남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북한 스스로를 위해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마무리 : 유엔의 역할과 개혁>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우리 앞에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새롭게 강화된 모습으로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엔의 개혁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유엔이 인류와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친구가 되고, 남을 배려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을 통해 국제적 책무를 다하려는 대한민국의 길에 격려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23/0503000000AKR20090923229700001.HTML